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중·장기 건립 방안 연구

A Research on the Medium- and Long-Term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Branch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곽동철(Dong-Chul Kwack)*, 심 경(Kyung Shim)**, 윤정옥(Cheong-Ok Yoon)***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는 미래지향적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중·장기 건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양극-다기화” 체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우선 하나의 직할 분관 건립에 주력하여 국가 도서관 체제의 양축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필요시 복수의 분야별 국립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 국가도서관 발전체제 구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직할 분관, 분야별 국립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의 협력 체제 확립과 국가 차원의 전국적 도서관서비스의 연계 협력 모형 구축 및 중·장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둘째,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및 제반 정책적 지원 방안 강구하며, 셋째, 국내 도서관들 간 지역별 도서관 협력체계의 국가적 차원 연계 및 각급 도서관의 역할 정립을 지원하고, 넷째, 국가의 지속가능한 도서관 발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키워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국가대표도서관, 도서관협력체계, 도서관경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 for the development of new branch librari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s the most appropriate strategic direction of planning the branches, proposed is the “bipolar and multidirectional” model

which means the establishment of the only one branch librar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n, if necessary, more than one national libraries later. In this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s a national library take a leading role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wide library system, develop a sustainable medium- and long-term plan for securing the appropriate budget, human resources, and legal support, and help all kinds of libraries improve the level of services.

【Keyword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ranch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Library Cooperative System, Library Management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출범한 이래 지난 60 여년에 걸쳐 법으로 명시된 국가대표도서관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그 기능의 상당부분이 공공도서관에 치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십일 세기 국·내외 도서관 정보 환경의 변화 및 국민의 정보요구 수준의 향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만이 아니라 모든 관중의 도서관을 대표하며, 모든 수준의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wackdc@cju.ac.kr) (제1저자)

** 아이리스넷 대표이사(shim@irisnet.co.kr) (공동저자)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공동저자)

한 의미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이 “모든” 이해당사자를 직접적으로 만족시키기보다는, 도서관들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몇 년간 분관의 건립을 추진해 왔고, 이는 2006년에 개정된 ‘도서관법’ 제18조 제2항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5조 제2항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업무 분장을 위해 필요한 때 분관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설립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관련해서는 분관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며, 새로운 ‘도서관법’ 하에서는 분관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어떻게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를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큰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05년 발표한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서 국내의 자료보존처리센터 역할 수행 및 권역별 자료보존관 건립 구상을 제시한 이래, 2006년 3월 발표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 등 일련의 연구용역을 통해 분관 건립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부산 분관 설립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던 계획은 지역별 혹은 권역별 복수의 분관 건립 제안으로 확대되었고, 지역에 국립도서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정치권과 광역시·도·자치단체가 개입하게 되었다. 이는 초기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권역별 자료보존관 건립 구상과 더불어, 지역별·분야별 분관 설립 및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에 정해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 간 자의적 해석과 주장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와 주장의 개입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목적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는 미래 지향적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주요 용어 및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우선 국립도서관과 국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전자는 국가가 설립한 도서관을, 후자는 한 나라의 국립도서관들 중 대표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서 국가대표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직할 분관과 분야별 국립도서관은 각각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과 설립주체가 국가인 국립도서관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과 계층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도서관을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2005년부터 진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과 관련된 각종 선행 연구보고서 등 문헌 분석과 주요 선진국의 국가대표도서관 관련 연구 분석 및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그동안 최우선 순위로 제시되었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대상 부지 및 사업추진의도에 대해서 현장 실사와 더불어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관 건립(안)의 현실적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및 법정 역할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방 이후 1963년 처음 ‘도서관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명칭과 역할이 정립되었고, 1987년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인받았다. 광동철(2004)은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및 법정 역할을 이 기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부터 1945년 해방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규정, 운영 방침 등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정리한 바 있으나,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지난 2006년 개정된 현행 ‘도서관법’에 규정한 내용만을 간추려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현행 ‘도서관법’에 명시된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적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 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

사·연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 설치, (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9)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처럼 현행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에서 명시된 기능 및 법정 역할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표 2>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기별 기능 및 법정 역할(1994-2006)

근거	기능 및 법정 역할	비고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1994)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1)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이용의 이용 (2)국내자료의 제출관리 (3)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4)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5)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6)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7)다른 도서관 및 문고의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지도·지원 (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9)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10)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11)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타] (1)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대표도서관 + 문고 + (국회도서관) *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 독서진흥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2006)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를 둔다. (8)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9)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기타] (1)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대표도서관 + (국회도서관) * 도서관연구소 (도서관발전정책개발조사연구)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지식정보격차 해소)

<표 2>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법정 역할 및 주요 추진사업

주요 기능 및 법정 역할	주요 추진 사업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수립 계획의 시행 - 납본제도의 운영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 등 - 보존서고의 운영 - 참고·정보봉사 - 국내 자료교환 및 지원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 국가서지 편찬 - 문헌정보처리 표준화 도구 개발 - KORMARC 개발 및 유지·발전 - 학술논저종합색인의 작성 및 발간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 도서관정보망 구축 - 디지털도서관 사업 -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p>(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직 공무원 직무교육 - 사서직 공무원 해외연수 - 사서자격증 발급·관리(한국도서관협회 위탁) - 공공도서관 협력망 운영 -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 각종 문화 전시회 개최
<p>(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국제교환 - 해외 한국학연구 지원 - 국제기구 및 회의 참여 - 도서관인 해외 상호교류
<p>(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연구소 설치 운영 - 도서관 관련 학술지·소식지 간행 - 학술세미나 개최 - 전국 도서관전산화 현황 조사 - 문헌정보학 자료실 운영
<p>(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관련부서와 협력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국회도서관과의 협력
<p>(9)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활동 촉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취약지역 주민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 - 각종 문화시설·교육시설 등과의 협조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바로 이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 당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도해왔던 국가차원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을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관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발전과 관련된 기획 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문고,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독서생활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 등과 관련된 역할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 반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 연구소를 두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방 이후 육십여 년 동안 몇 차례 도서관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현행 '도서관법'에 이르기까지 법으로 명시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및 법정 역할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모든 도서관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은 그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기능 및 법정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행 '도서관법'에서 전국의 특별시·광역시·도·자치단체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이 명문화됨에 따라, 이들과 구별되는 동시에 이들을 아우르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및 정체성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3. 주요 선진국 국가도서관의 사례 분석

여기에서는 미국의회도서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및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의 사례를 통해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위상 및 국가서지기관으로서 추진하는 수서·납본정책, 그리고 지역의 다른 도서관들과의 관계 및 차별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3.1 미국의회도서관

미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인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사명은 "그 소장자료를 의회와 미국국민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고 쓸모 있게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지식과 창의성으로 가득 찬 폭넓은 장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Library of Congress 2008a). 여기에서 명시한 국가장서의 수집, 보존, 제공이라는 사명을 위해, 미국의회도서관은 다음 세 가지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수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2008b). 첫째, 미국의회도서관은 미국의회와 연방정부의 다양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책과 기타 도서관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미국의회도서관은 미국인의 삶과 업적을 기록한 모든 책과 기타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미국의회도서관은 다른 사회(societies),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기록, 특히 미국인에게 가장 즉각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와 사람들의 경험을 담은 기록을 수집한다.

미국의회도서관은 “의회도서관 장서의 범위”는 연구도서관그룹(The Research Libraries Group)이 개발한 RLG Conspectus라고 불리는 장서수집수준 체계에서 제시된 수준을 정책선언에 채택하고 있다. 이 장서수준은 제외 영역(Out-of-Scope), 최소 수준(Minimal Level), 기본정보 수준(Basic Information Level), 교육지원 수준(Instructional Support Level), 연구 수준(Research Level) 및 포괄적 수준(Comprehensive Level)을 포함하고 있다. 제외 영역은 도서관이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한 영역이고, 그 밖에는 각기 특정한 주제, 수준, 범위 및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수준은 제한된 분야에서 가능한 한 모든 언어로 된, 기록된 지식(간행물, 원고, 및 기타 형태)의 모든 중요한 저작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수준의 장서밀도는 “특수 컬렉션(special collection)”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수준은 반드시 달성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망라성(exhaustiveness)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수준에서 오래 된 자료는 역사 연구를 위해서 유지되고, 법률 컬렉션에서 이 수준은 필사본, 논문 및 법률적 측면 이외의 자료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2008c).

미국의회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납본을 받아도 납본 받은 모든 자료를 반드시 소장하거나 보존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위한 의무납본규정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으로 하여금 미국 내에서 간행된 모든 저작권 등록 가능한 저작의 카피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의 “Section 704”는 이렇게 납본된 자료들을 “미국의회도서관이 자체 컬렉션을 위해서, 혹은 다른 도서관과의 교환이나 이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http://www.copyright.gov/circs/circ07d.html>). 다시 말하면 납본된 모든 자료를 반드시 미국의회도서관 컬렉션에 편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상기한 수서 정책 및 장서수준과 범위에 대한 기준에 적합한 것만을 소장 및 보존한다.

한편 미국의회도서관이 소재한 워싱턴 DC 지역은 중

앙도서관 및 26개의 분관으로 구성된 공공도서관 시스템인 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가 2004년 현재 571,422명 정도의 인구를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다. 사실상 워싱턴 DC는 메릴랜드 주내에 위치하지만 독립적 행정단위로서 주(State)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주립도서관(state library)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직원 402명, 그 가운데 사서는 161명, 2004년 한해 예산 \$27,922,146(279억 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는 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가 공공도서관 시스템이자 주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립도서관, 뉴욕주립도서관 등과 같이 다른 지역의 지역대표도서관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 2005).

미국의 또 다른 국립도서관인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과 국립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이 소재한 메릴랜드 주 역시 독자적인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주 역시 Washington, DC와 마찬가지로 주립도서관을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중앙도서관인 Enoch Pratt Free Library가 1971년 주 의회에 의하여 주립도서관자원센터(State Library Resource Center: SLRC)로 지정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LRC는 메릴랜드 주의 “대리” 주립도서관, 즉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 전역 및 볼티모어 시 지역의 공공, 학교, 전문 및 대학도서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협력하고, 주 전체에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SLRC는 메릴랜드 주민 전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도서관들과 이용자들을 위한 지원정보자원(back-up information resource) 역할을 한다(<http://www.prattlibrary.org/locations/central>).

이처럼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시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회도서관이나 국립의학도서관, 국립농업도서관과 같이 방대한 규모의 국가대표도서관이나 주제 분야별 대표도서관이 있어도,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자체적으로 주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2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일본의 유일한 국립도서관인 국회도서관은 2008년 60

주년을 맞으면서 “지식을 통한 번영(Through knowledge we prosper)”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곱 가지 실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Nagao, Makoto 2008). 그 실천 목표는, (1)국회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입법지원기능을 확대하고, (2)국가 공동자원으로서 보존하기 위하여 일본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며, (3)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접근 혹은 링크를 제공하고, (4)어디에 있던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하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구하며, (5)사회에게 다양한 매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도서관의 가시성을 증대시킴, (6)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일본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7)해외의 도서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도록 노력한다고 설정하였다.

일본국회도서관의 장서는 납본, 구입, 교환 및 기증을 통해 수집된다(<http://www.ndl.go.jp/en/service/tokyo/data.html>). 이 장서는 도쿄본관, 관서관 및 국제어린이 도서관에 분산 소장된다. 도쿄본관의 장서는 일본과 서양서, 일본 정기간행물, 서양어로 된 연간 간행물(annual periodicals)과 일부 단행본 시리즈, 일본과 서양신문, 특수자료실 소장자료(전자저널과 CD-ROM 같은 디지털 간행물 포함)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일부 자료는 2002년 10월 개관한 분관인 관서관(關西館Kansai Library)으로 이관되었다. 즉, 서양 정기간행물(연간 간행물과 일부 단행본 시리즈 제외), 아시아 자료(동양어로 된 책, 정기간행물, 신문), 일부 과학기술자료(기술보고서, 학회회의 외국논문, 일본 및 외국표준, 외국특허, 외국학위논문, 서양어 학술회의자료), 일본문부과학성의 기금지원 받은 과학연구보고서, 일본박사학위논문, 오디오북[테이프 녹음책]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관서관은 도쿄(東京)에서 서쪽으로 5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교오토(京都)에 저장시설 겸 서비스 포인트로 만들어졌고, 상호대차와 문헌제공 서비스 센터 역할을 함으로써,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Yoshitaka Ikuhara 2002). 이 관서관은 납본 제도에 따라 일본에서 포괄적으로 간행물을 수집하는 도쿄 본관과는 달리 “연구도서관”이라는 목적 하에 별도의 장서개발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ndl.go.jp/en/service/kansai/collection/collection_top.html).

일본은 납본을 시행하는 이유가 “미래 세대를 위해 최대한 완전한 ‘국가장서(national collection)’을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National Diet

Library 2006). 일본의 납본체제는 첫째,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국내 간행물을 수집한다. 둘째, 출판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간행물이 도서관에 도달하게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두 가지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國會圖書館法(법령 5호, 1948년 2월 9일)”에 따라 간행물을 크게 정부간행물(24조와 24-2)과 민간간행물(25조)의 두 개 범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국회도서관과 지역 도서관들과의 관계는 “國會圖書館法”의 ‘제8장. 일반 공중 및 공립 또는 기타 도서관에 대한 봉사’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http://www.ndl.go.jp/aboutus/data/a1102.pdf>).

제21조. 국립국회도서관의 도서관봉사는 직접 혹은 공립 또는 기타 도서관을 경유하여, 양의원(兩議院), 위원회 및 의원, 아울러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으로부터의 요구를 저해하지 않는 한, 일본국민이 이것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실시한다.

동 법 제21조 2항은 국회도서관이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도서관의 조직 및 도서관봉사의 개선에 대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의회 및 기타 지방의회, 공무원 또는 도서관인을 원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을 위한 지원 및 공중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제공하는 것일 뿐 어떤 관중의 도서관과도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는다.

일본의 공공도서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圖書館法” ‘제2장. 공립도서관(설치) 제10조’에서 “해당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정책특별위원회는 1989년 확정 공포되고 2004년 개정된 “공립도서관의 임무와 목표(公立圖書館の任務と目標)”의 ‘제1장. 기본적 사항(공립도서관의 역할과 요건) 1조’는 “...공립도서관(公立圖書館)은 ‘도서관법’에 기반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교육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관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http://www.jla.or.jp/ninmu.htm>).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시(구)정촌립도서관(市(區)町村立圖書館)과 도도부현립도서관(都道府縣立圖書館)을 포함하고 있다. 동 문서의 ‘제3장. 도도부현립도서관(都道府縣立圖書館)’은 도도부현립도서관(‘현립도서관’이라고도 함)은 지방자치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구)정촌립도서관(市(區)町村立圖書館)’(제2장)에 대

한 지원을 “제일차적인 기능”으로 삼지만, “시정촌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도 수행한다(53조). 또한 보유한 자료와 기능을 “많은 경우 시정촌립도서관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하지만(54조), “시정촌립도서관을 이용하는가, 직접 현립도서관을 이용하는가는 주민 각자가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55조). 이처럼 현립도서관과 시정촌립도서관은 운영주체가 다르고, 기관의 일차적인 목표가 다르며, 전자가 후자를 지도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하는 관계는 아니다(56조). 그러나, 특정한 지역사회에 같이 있을 경우 상호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모두 주민에게 밀착한 장서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국회도서관 관서관이 소재한 교토시의 京都市図書館은 시정촌립도서관 수준으로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스무 개의 분관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08년 현재 성인도서 1,165,413책, 아동도서 551,320책, 18,027점의 성인시청각자료, 2,729점의 아동시청각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市府縣 및 국가관계 행정자료, 신문, 잡지 등을 수집, 소장하고 있다(京都市図書館 2008). 따라서 관서관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서와 기능의 특성 상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중복 혹은 상충되지 않는다.

3.3 영국국가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인 영국국가도서관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지식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Helping people advance knowledge to enrich lives)”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사명은 “지식의 힘과 가치가 사회에 문화적, 사회적, 지적 및 경제적 혜택을 가져 온다”는 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국가도서관은 2005년~2008년의 전략에 따라 설정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영국국가도서관은 변화하는 연구정보의 세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도서관으로서 영국의 연구 기반구조에 중심적 자원이 되고, 모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지원한다. 둘째, 학술적, 개인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 도서관의 장서와 전문성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무한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점점시간과 공간에 독립적인 통합 서비스를 통하여 도서관장서와 전문성에 대한 즉각적 접근을 촉진한다. 장서에 인쇄, 디지털 및 기

타 매체가 포함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며, 서비스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매끄럽게 모든 포맷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다른 기관의 장서와 전문성을 연결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파트너 쉽으로 일한다. 풍요한 정보의 세계에서 영국국가도서관이 모든 것을 소장하는 것이 적합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The British Library 2008a).

상기한 비전을 바탕으로 하여 British Library는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광범하게 그리고 깊은 범위로 자료를 수집”하는 정책을 가지며, 여러 단계의 장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국 출판의 지적 산출물을 후대를 위하여 보유함으로써 국가의 집합적 유물을 대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의무 납본 입법을 통해 영국에서 발간되는 모든 책, 연속간행물 및 신문을 수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구수준의 자료 및 다양한 포맷으로 된 적합한 수준의 미간행 자료도 구입한다.

이 도서관의 장서정책은 국가 전체를 위한 “최초 단계(first instance)”이자 “최후 보루(last resort)”인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차적으로 대학, 기업, 공공도서관 등에 갔다가 각급 도서관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British Library에 와서 찾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의지”가 되며, 처음부터 이 도서관만이 갖고 있는 연구 자료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요구 충족을 위한 유일하며 편리한 접근 장소라는 면에서는 “최초 단계”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British Library의 장서는 대형 연구도서관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전세계에서 수집한 연구 수준의 자료 및 과학연구에 적합한 자료들로 구성된다. 이들 장서는 열람실에서 직접 이용하거나 혹은 상호대차, 원문제공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된다(The British Library 2008b).

한편 British Library는 장서를 “단일 개체(a single entity)”로서 유지하므로, 분관인 보스턴스파의 BLDS(C)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er)의 장서 역시 동일한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수집한다. BLDS(C)에는 과학, 기술, 의학 및 인문지식의 모든 측면을 모든 언어로 수집하는데, 정기간행물, 책, 컨퍼런스, 보고서, 특허, 논문, 정부간행물, 악보, 이미지 등을 다 포괄한다. 장서 수준의 예는 책을 선정하는 데서 볼 수 있다. 현재 3백만 이상을 소장하고 있고 매년 45,000권 정도 입수하는 책을 진지한 중요한 연구와 학습에 필요하며, 공공도서관

과 같은 지역의 도서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선정한다. 따라서 청소년, 소설, 오락간행물 및 실용적인 “how-to” 책이나 학교 교과서를 수집하지 않는다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coldevpol/index.html>).

영국에서는 국가의 인쇄자료의 보존이 납본이라는 법적 요구조건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거의 사백여년 동안 확고히 확립되어 왔다. 기탁된 간행물은 다양한 열람실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고 국가 유산의 일부가 된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출판사와 배포자는 모든 간행물의 한 부를 발간 후 한 달 이내에 British Library의 납본사무소(Legal Deposit Office)에 납본할 법적 의무가 있다. British Library의 권리는 “납본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과 “저작권 및 관련법(Copyright and Related Act, 2000)”에 근거하여 납본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 목록에 수록되며, 대부분의 책과 새로운 연속간행물은 영국국가서지(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BNB)에 수록되어 인쇄, CD-ROM, MARC 형태로 배포된다(The British Library 2008c).

영국에서 국가대표도서관과 지역도서관과의 BLDSC가 소재한 보스턴스파 지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보스턴스파는 웨스트 요크셔 지역의 메트로폴리탄 구역인 리즈 시(City of Leeds)의 웨더비(Wetherby) 지역에 속한다. 2006년 현재 인구가 750,000명 정도인 리즈 시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인 리즈도서관정보서비스(Leeds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는 대규모 중앙도서관과 53개의 도서관 및 5개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http://www.leeds.gov.uk/Community_and_living/Libraries.aspx). 또한 앞에서 수서 및 장서관리 정책에서 명시한 것처럼 이러한 지역도서관들이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나 서비스를 British Library나 BLDSC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수준과 목표가 다른 도서관들 사이에 명백한 경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주요 선진국 국가도서관의 운영상 시사점

여기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국가도서관들은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법적으로 부과된 “국가를 대표함”이라는 사명에 기반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의회도서관이 명실공히 “ 으뜸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국립의학도서관과 국립농업도서관은 주제 분야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두 도서관은 각기 주제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결코 미국의회도서관의 분관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 세 개의 독립적 국립도서관이 마치 “삼두마차”와 같은 기능분담체제를 갖는다고 하는 편이 타당하다.

또한 이들 미국의 국립도서관들은 소재지의 공공도서관, 혹은 그 중에 주립도서관과 같은 지역대표도서관의 존재나 역할과는 무관하게 국립도서관으로서의 독자적 목표와 비전을 갖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가 전체를 위한 자원 수집, 보존, 정보와 접근 제공, 도서관 지원 및 정책 추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역 단위의 공공도서관 체제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국가대표도서관과는 무관한 공공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 즉 입법기관을 위한 전문도서관인 동시에 국가대표 도서관 역할을 한다. 한편 분관인 관서관은 “국가 지식정보의 보존센터,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의 정보거점, 국내외 문헌제공 서비스의 총괄기관”의 역할을 한다(윤희운 2006). 관서관은 서비스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도쿄 본관이 담당하던 상호대차와 문헌제공 서비스 기능을 분리하여 전담함으로써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다. 이들은 기능적 분담체제로 운영되며, 물론 그러기 위해 수집 및 소장 자료의 주제나 형태도 각기 특성을 지닌다.

셋째, 영국은 국가대표도서관인 British Library와 보스턴스파에 소재한 분관인 BLDSC가 “단일 개체”로서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이 두 도서관 모두 공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서의 범위나 수준면에서 공공도서관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며, 아예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수집의 범주에 넣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 목적이라도 적어도 연구 수준의 이용자를 위해서 봉사하므로 중복되지 않는다.

이 세 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들이 목표로 하는 “국가 수준”의 장서수준과 범위를 중심으로 한 수서정책을 보면, 반드시 모든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장서 목표에 따라 전체 장서 안에서라도 수집 대상 자료의

수준과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자료를 수집, 보존 및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의회도서관과 역할을 분담한 국립의학도서관과 국립농학도서관이 특정한 해당 주제영역에서 수집된 자료의 소장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한다. 영국의 BLDS나 일본의 관서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만약에 설립된다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반드시 그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관이 소재하는 지역이 어디든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 혹은 지역대표도서관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기능을 중복 혹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도서관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대표라는 제한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생겨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해주는 공공도서관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불식시키며, 보다 큰 국가도서관 체제의 목표 하에 분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이 특히 수서와 장서개발 측면의 목표를 조정함으로써, 분관이 분담해야 할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이 모든 납본 자료를 그 수준이나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장서로 유지, 관리, 보존하려고 한다면, “당대의 지식문화유산을 완전하게 수집, 관리, 서비스하고 후대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하는 총괄적 기능을 수행” 하자는 주장도 어떤 면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부산발전연구원 2008). 다시 말하면 완전한 범위가 아니라 “선별된” 지식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수준 자료를 수집, 전승 및 제공하고, 분관을 서비스 포인트로 삼아서 그러한 국가장서가 보다 원활히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4.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 건립의 전략

4.1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관련 논의의 개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 관한 논의는 당초 부산 분관의 건립을 대상으로 구상되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발주하여 2006년 3월 완료된 연구용역의 결과에서 부산 분관 건립의 당위성과 더불어 3개 지역 거점에 분관을 추가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지역 거점별 국립도서관 건립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별 분관 유치에 대한 과열 경쟁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6년 10월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이 규정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4개 지역 거점 분관과 지역대표도서관과의 기능 중복 혹은 역할 상충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사업 추진 방향의 설정 및 업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서관법’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별·분야별 분관과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은 설립 및 운영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명백히 상이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립중앙도서관이 분관 건립의 목표 및 기능적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광역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관할구역에 설립되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몇몇 광역자치단체가 마땅히 자체적으로 설립해야 할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복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건립이 모기관이나 특정 정부 부처의 입지 확장 의도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전체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 확립과 비전 제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도서관법’이 전부개정·시행되기 전에 수립된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기본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기본 전제와 현장 실사 및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시된 계획(안)들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이를 유형별로 비교·분석하면 <표 3>과 같다.

- 제1안(부산시) : 중앙관(서울)-분관(부산) ; 부산시의 건의 및 요청에 의해 추진
-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기본구상 연구』 연구용역 (연구책임자: 임 호; 발주처: 부산광역시)

-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조사자: 한국개발연구원; 발주처: 기획예산처) → 부적합 판정
- 2008년 『국립광주도서관 기본구상 연구』연구용역 (연구책임자 정준민; 발주처: 광주광역시) → 예비 타당성 조사 추진 예정
- 제2안 (윤희운 등) : 중앙관(서울)-분관(부산, 행복, 대구, 광주) ; 부산 분관에 대한 타당성 입증과 3개 분관 추가 건립(안) 제시
 -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연구용역 (연구책임자: 윤희운; 발주처: 국립중앙도서관)
 -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대구지역 유치관련 타당성 검토보고서』(연구책임자: 윤희운; 발주처: 대구광역시)
- 제3안 (서혜란 등) : 중앙관(서울)-분관(부산, 행복) ; 2개 분관 건립(안) 제시
 - 2008년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 연구』(연구책임자: 서혜란; 공동연구원: 이용재, 윤희운; 발주처: 부산발전연구원) →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 제4안 (현재 추진중) : 중앙관(서울)-분관(부산, 행복, 광주) ; 현재 기본사업 예산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3개 분관 건립(안) 제시
 - 2008년 『행정도시 종합도서관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조사자: 한국개발연구원; 발주처: 기획예산처) → 예비타당성 조사 → 적합 판정
- 제5안 (곽동철 등) : 중앙관(서울)-직할 분관(부산)-분야별분관(행복, 광주, ○○ 등)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 최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표내용을 수렴하여 분관 건립(안) 제시
 - 2008년 『국립도서관 분관건립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연계방안 연구』연구용역 (연구책임자: 곽동철; 공동연구원: 심 경, 윤정옥, 정진주; 발주처: 국립중앙도서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안이 당초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구상이라고 한다면, 제2안, 제3안, 제4안은 현행 국가도서관 체계를 서울 중심(중앙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서울(중앙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지역 거점(지역별 분관)으로 재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도서관 시스템의 재구축이라는 면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조란 면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기존 건립 계획은 서울 소재의 중앙관(본관)과 분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4대 거점도시의 국립분관(부산·경남권, 행복도시·충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립분관 건립계획은 광역시·도의 특성과 상대적 강점, 국가의 권역별 혁신도시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산분관은 해양·물류, 행

〈표 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계획(안) 비교 분석

	가치	특징	유형	비고
제1안 (서울=부산)	국가대표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및 국가도서관 정책의 경제성 추구	지역대표도서관과 무관하게 자체 설립·운영 계획의 수립·추진 가능	양극(兩極) 체제	영국, 일본의 유형
제2안 (서울-부산, 행복, 대구, 광주)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 추구 및 주제 특성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과 상충 소지 및 자치단체별 유치 과열 우려	다극(多極) 체제	프랑스, 독일의 유형
제3안 (서울-부산, 행복)	‘제1안’ 기반 위에 행정 및 정책 정보서비스 강화	자치단체별 유치경쟁 촉발 우려	양극(兩極)+다극(多極) 체제	다극체제 전환우려
제4안 (서울-부산, 행복, 광주)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 추구 및 주제 특성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과 상충 소지 및 자치단체별 유치 과열 우려	다극(多極) 체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제5안 (서울=부산-행복, 광주, ○○ 등)	국가대표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및 국가도서관 정책의 경제성 추구	지역대표도서관과 무관하게 자체 설립·운영 계획의 수립·추진 가능	양극(兩極)-다기화(多岐化) 체제	영국, 일본기반 + 미국형 부분가미

복도시는 행정·정책, 대구분관은 교육·학술, 광주분관은 문화·예술로의 특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그 분관을 대형 공공도서관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라고 하겠다.

4.2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계획의 지향점

지금까지 기술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계획(안)들은 각기 타당한 근거 및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분관을 통한 지리적 분산을 추진하는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 국립도서관 체제가 발전해 온 맥락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국립도서관 체제는 이전 연구들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므로, 그 요점만 살펴보면, 영국은 “지리적 분산제-시스템적 집중제-기능적 차별화”, 독일은 “지리적 양분제-시스템적 집중제-기능별 분담제”, 프랑스는 “지리적 분산제-시스템적 집중제-자료의 유형·주제·기능별 분담제”, 또한 일본은 “지리적 양분제-시스템적 집중제-이용대상 및 주제별 분담제”(윤희운 2006), 그리고 미국은 “지리적 분산제-시스템적 분산제-주제별 분담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영국의 경우에 ‘지리적 분산제’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리적 양분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주요 국가의 국립도서관 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리적 분산제” 혹은 “지리적 양분제”이다. 그 같은 분산된 도서관 체제가 가능한 이유, 혹은 필연적인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는 중앙 혹은 수도의 국가대표 도서관 외에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도서관들을 조정 혹은 통합함으로써 국립도서관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그와는 반대로 중앙에 존재하던 단일체제를 개편하여 다른 지역에 분관을 전적으로 새롭게 건립함으로써 국립도서관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 주요 국가와는 역순으로 지리적 분산을 추진함에 따라, 그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분관을 통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영

국이나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비교적 잘 발달된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가대표도서관이나 분관이 어떤 지역에 입지하든,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 혹은 지역대표 도서관과 같은 기관들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하자면 국립도서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이라고는 하나, 주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존재해 왔고, 또한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을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아직 전체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가 운영하는 하나의 “대형” 공공도서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건립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은 분관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의 적절한 업무 수행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분관의 건립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장 공간의 확보라는 현안의 해결과 더불어, 모든 관중의 도서관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정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화유산 보존 및 대(對)국민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분담 및 특성화 등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3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중·장기 건립 방향

전술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계획(안)들을 분석한 내용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2008년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및 상기 분관 건립 계획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고려한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한 정체성 확립, 국가차원의 지식문화유산 보존 등의 목적과 방향성을 지닌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건립 방향은 상기 5가지 건립 계획(안) 가운데 하나로서 분관인 중앙관과 ‘직할분관’이라는 양극(兩極) 체제를 기반으로 분야별 다기화(多岐化)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전술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국토면적 등이 우리와 비슷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국가는 본관(중앙관)과 그 대척점에 해당되는 지역에 분관을 건립하여 공고한 국가대표도서관의 양극 체제를 확립하면서, 분야별 도서관을 부가적으로 결합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다기화 체제”는 다음 <표 4>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본관(중앙관)과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권역별 분관이라는 “다극(多極) 체제”를 지양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강화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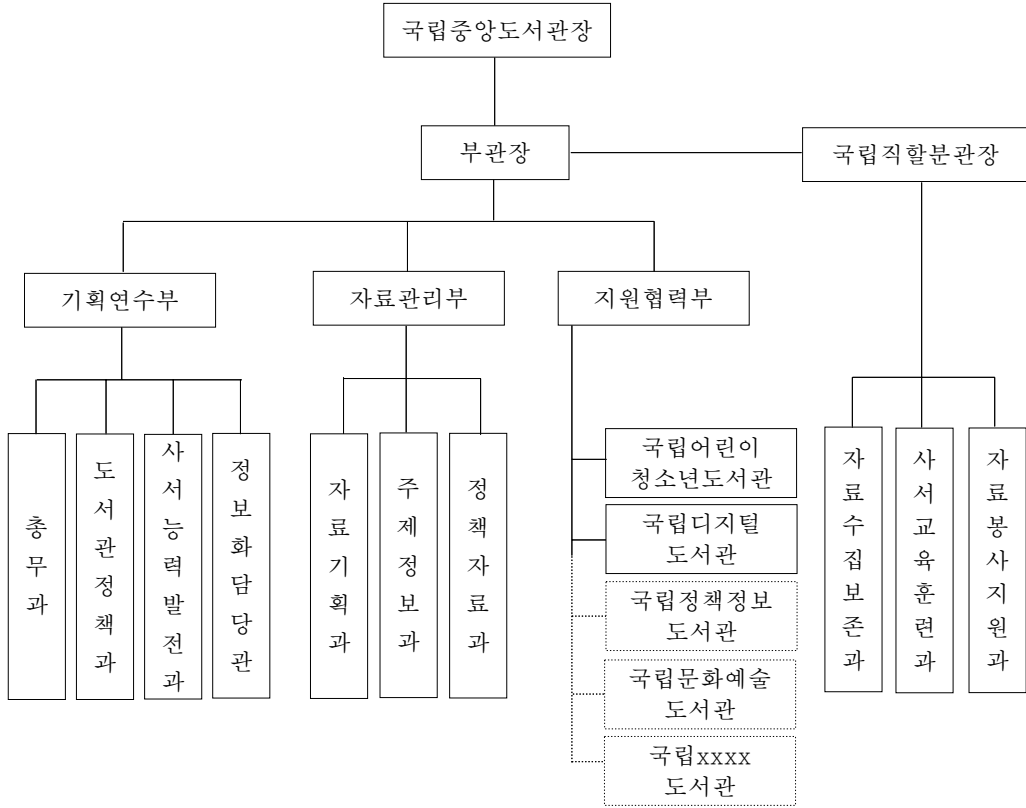
여기에서 말하는 양극(兩極) 또는 다극(多極) 체제란 국립중앙도서관 직할 운영 체제를 의미하며, 다기화(多岐化) 체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분야별 국립도서관이 운영에 있어서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관심을 가진 자료의 유형·주제·기능별 분담제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지리적 분산제, 즉 “다극 체제”의 분관 건립 계획은 사실상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제안

하는 분관 건립 방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당초 구상하였던 양극화 체제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향후 필요시 분야별 국립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함으로써 다기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야별 국립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주제 분야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의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가 관장하고 있으며, 미국국립농업도서관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관장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대표도서관이 모든 분야별 국립도서관을 관장하거나 설립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국립도서관 체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포함한 본관(중앙관)과 직할 분관의 경우에 “지리적 양분제-시스템적 집중제-기능적 차별화”를 원칙으로 양극 체제의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고, 분야별 국립도서관의 경우에 지역별 안배보다는 주제 분야의 특성화를 통한 주제별 분담제(프랑스, 일본, 미국)와 같은 다기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구성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정점으로

<표 4>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계획 수립 방향

	기존 연구자의 분관 건립 방향		본 연구자의 분관 건립 방향	
건립계획	제2안, 제3안, 제4안		제1안, 제5안	
체제	다극(多極) 체제		양극(兩極) - 다기화(多岐化) 체제	
가치	지역간 도서관이 균형발전 추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국가 도서관 정책의 정체성 추구	
특징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과 상충 소지 및 자치단체별 유치 과열 우려		지역대표도서관과 무관하게 자체 설립·운영 계획의 수립·추진 가능	
제시 모형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p>본관(중앙관)</p> <p>┌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p> <p>└ 국립디지털도서관</p>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직접적 관계</div> <div style="margin-right: 10px;">┌</div> <div style="margin-right: 10px;">└</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p>분관(부산, 행복, 광주, 대구)</p> <p>국립중앙도서관 xx분관 또는 국립xx도서관</p>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직접적 관계</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p>본관(중앙관) — 직할분관</p> <p>┌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p> <p>└ 국립디지털도서관</p>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직접적 관계</div> <div style="margin-right: 10px;">┌</div> <div style="margin-right: 10px;">└</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p>분야별국립도서관</p> <p>국립정책정보도서관</p> <p>국립문화예술도서관</p> <p>국립xxxxxxx도서관</p>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직접·간접적 관계(일부 독립성보장)</div> </div>	
참고 사항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계획으로 건립 이후 운영 및 유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음		미국 등 다수 “국립도서관”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취하는 모델이며, 국가대표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이 구분됨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의 양극-다기화 운영 체제

부관장 및 부관장 직급의 국립중앙도서관 직할분관장을 두고, 분야별국립도서관들과의 원활한 지원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협력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해 분관 건립 초기부터 직할분관 위상을 격상시켜 서울의 중앙관(본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디지털도서관)과 직할분관을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양극으로 삼고, 지역거점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분야별국립도서관(국립정보정책도서관, 국립문화예술도서관, 국립xxxxx도서관 등)을 다기화 체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한시적으로는 각각의 분관들이 대등한 위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4.4 양극-다기화 체제 하의 국립도서관 분관의 역할 제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양극-다기화(안)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정체성 확립 및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실

상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토발전의 성장축과 생명축의 연계 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기본 구상인 제1안과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의 내용 가운데 명시된 주제 분야별 국가대표 전문도서관의 건립·운영 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이러한 양극-다기화(안) 체제로 추진할 경우, <표 5>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직할 분관은 본관(중앙관)과 양극 체제를 이루어 기본적 기능 및 역할을 분담 또는 전담함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의 내실 강화와 외연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분야별 국립도서관은 향후 국립 '주제별' 도서관으로 다기화 체제의 구성요소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은 중앙관으로서 국가장서를 수집, 관리하는 국가대표도서관, 납본도서관, 보존도서관, 정책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총괄한다. 따라서 중앙관은 국립직할 분관과 분야별국립도서관을 정책적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시스템을 분관에 제공하며, 중앙관의 수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에 일부 자료를 분관으로 이관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직할 분관이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면, 중앙관은 주요 국가장서의 보존 및 서비스센터로, 직할 분관은 최신 자료의 보존 및 전국적 접근·이용을 주도하는 도서관네트워크센터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직할 분관은 사실상 ‘도서관법’에 설립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능이나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분관’이란 명칭은 일반적으로 모기관의 ‘추진 업무나 자료의 주제별 특성화’ 및 ‘대국민서비스 거점으로서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공’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직할 분관은 지리적 위치를 달리 할 뿐이지 중앙관의 역할들 가운데 국가대표도서관의 정체성 확보 및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또는 상대적 우위 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향으로 건립·운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5>에 보는 바와 같이 직할 분관은 중앙관 주요 업무의 분담 수행·지원(납본 수행 등), 국가장서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이관자료, 자체 수집 자료의 보존센터 운영, 국가서지센터 및/혹은 사서교육·훈련센터 기능의 분담 또는 전담, 국가장서와 서비스 이용의 기회 확대 거점, 문화서비스프로그램 확산과 전자정보자원 서비스 거점, 지식격차 해소 기능 분담 및 특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분야별 국립도서관들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봉사에 대한 대상 자료의 주제나 이용자 및 소관 행정부처 등에 따라 주요 역할 및 업무를 서로 달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복도시에서 추진하는 (가칭) 국립정책정보

도서관은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책 및 행정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국립정책정보도서관’으로서의 특성과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추진하는 (가칭) 국립문화예술도서관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가칭) 국립 000 도서관의 경우도 행복도시의 경우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그 주제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들은 주제별 국가 장서 이관자료, 자체 수집 자료의 보존센터 운영, 중앙관과 주제별 전문도서관과의 연계협력 및 지원, 그리고 필요시 중앙관 납본업무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양극-다기화 체제 하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분야별 국립도서관은 어느 지역에 설립·운영되든,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 혹은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을 절대로 침해 혹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들 각 도서관의 법적 근거와 설립 및 운영주체, 목표와 사명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국립도서관 분관의 유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주민들이 공공재로서의 도서관서비스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은 분관의 유치를 그 지역에서 마땅히 자체적으로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공공도서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대행 혹은 위탁하게 할 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5> 중앙관, 국립직할 분관, 분야별국립도서관의 주요 기능과 업무

중앙관(본관 등)	국립직할 분관	분야별국립도서관
1. 국가 도서관정책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기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1. 중앙관 주요 업무의 분담 수행·지원 (납본 수행 등) 2. 국가장서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이관자료, 자체 수집 자료의 보존센터 운영 3. 국가서지센터 기능의 분담 또는 전담 4. 사서교육·훈련센터 기능의 분담 및 전담 5. 국가장서와 서비스 이용의 기회 확대 거점 6. 문화서비스프로그램 확산과 전자정보자원 서비스 거점 7. 지식격차 해소기능 분담 및 특성화	1. 주제별 (정책정보, 문화예술등)자료의 수집·개발·제공 2. 주제별 국가 장서 이관자료, 자체 수집 자료의 보존센터 운영 3. 중앙관과 주제별전문도서관과의 연계협력 및 지원 4. 중앙관 납본업무의 대행

5. 결론 및 향후 정책방향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법정 역할 및 분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계획(안)들 및 주요 선진국의 사례들을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건립은 필요하지만, 이전의 여러 연구 및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단순한 “지역 안배”를 연상하게 하는 논리로서 다수의 분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가 없으며, 장기적 관점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은 양극-다기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을 제안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건립의 양극-다기화 체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만을 건립함으로써, 중앙의 국립도서관과 지방의 직할 분관이 양측으로서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분담 및 강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만약 장기적으로 그 이상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면 또 다른 국립중앙도서관 직할 분관이기보다는 분야별 국립도서관의 성격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다기화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설립과 운영의 주관 부처는 반드시 국립중앙도서관일 필요는 없고, 분야별 국립도서관으로서 주관 부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난 몇 년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논의하는 사이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설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현재 추진되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역할이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대표도서관, 그 분관 및 지역도서관들이 상이한 운영주체와 목표 하에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지역대표도서관도 각 기관에 부여된 상이한 법적 기능과 목표에 따라 발전해가야 함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국가 도서관 시스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이 서로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나, 그러한 내용은 향후 다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후속과제는 국립도서관 분관 건립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연계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차원의 기록문화유산 보존 및 지식강국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 전체의 도서관 체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건립될 국립중앙도서관 직할 분관과 분야별 국립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이 각기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긴밀하고도 효율적인 연계협력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직할 분관과 분야별 국립도서관의 건립·운영 계획을 구체화함과 더불어 지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 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차원에서 전국적 도서관서비스의 연계 협력 모형을 구축하며, 이에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분관을 건립·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보다도 국가대표도서관에게 부여된 법정 역할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국민을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실제로 분관 건립만이 아니라 그 밖에 도서관과 관련된 현재 및 향후 사업들이 모두 국가차원 도서관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야만 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상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및 제반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은 직할 분관과 분야별국립도서관의 건립·운영, 지역대표도서관과의 연계협력 체제 확립, 국가차원에서 전국적 도서관서비스의 연계 협력 모형 구축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내 각 도서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반영하고, 이들의 실질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조정하는 리더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소요 예산, 인력, 사업기간, 실천의지, 내·외부 협력 등의 제반 요소 등에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 및 대비하고, 사업 추진 전반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은 무엇보다도 국내 도서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별 도서관 협력체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연계시키는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관(본관), 직할 분관, 분야별 국립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및 모든 도서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서 모든 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만이 아니라,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

관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차제에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사실상 국가대표 도서관이기보다는 공공도서관의 대표 역할에 주력해 왔던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국가대표도서관들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할 수 있는 국가도서관 운영 체계를 도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모든 도서관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규, 제도, 시스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기반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도서관 발전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상이한 목표, 요구 및 운영기반을 가진 모든 도서관들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체제에 대한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적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의 건립과 운영은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 도서관서비스의 연계 협력 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곽동철. 2004.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수립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205-227.
- 곽동철, 심 경, 윤정옥. 2004b.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운영 및 국가대출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부산발전연구원. 2008.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관련 타당성 검토 연구』.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윤희윤. 2006.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 기본계획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京都市図書館. 2008. “京都市図書館の概要: 資料數一覽.”
 <<http://www.kyotocitylib.jp/gaiyo/siryou01.html#1>> [cited 2008.7.9].
- 日本. “國會図書館法.” 昭和二十三年二月九日法律第五号. 最終改正 同二十年 四月二十五日 同 第二十号.
 <<http://www.ndl.go.jp/jp/aboutus/data/a1102.pdf>> [cited 2008.7.9].
- 日本. “図書館法.” 昭和二十五年四月三十日法律第一百十八号. 最終改正年月日: 平成一九年六月 二七日法律第九六号.
- 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政策特別委員會. “公立図書館の任務と目標.” 1989年1月 確定公表 2004年3月改訂.
 <<http://www.jla.or.jp/ninmu.htm>> [cited 2008.7.18].
- 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 2005. “2004 Annual Report: Breaking Grounds.”
 <http://www.dclibrary.org/dcpl/lib/dcpl/pdf/annual_reports/dcpl_annualreport_2004.pdf> [cited 2008.7.3].
- Enoch Pratt Free Library. “Central Library.”
 <<http://www.prattlibrary.org/locations/central/>> [cited 2008.7.9].
- Leeds City Council. “Libraries.”
 <http://www.leeds.gov.uk/Community_and_living/Libraries.aspx> [cited 2008.7.18].
- Library of Congress. 2008a. “About the Library.”
 <<http://www.loc.gov/about/mission.html>> [cited 2008.7.7].
- Library of Congress. 2008b. “Collections Overviews - General Statement.”
 <<http://www.loc.gov/acq/devpol/colloversviews/generalstmt.html>> [cited 2008.7.8].
- Library of Congress. 2008c. “Cataloging and Acquisitions: Collecting Levels.”
 <<http://www.loc.gov/acq/devpol/cpc.html>> [cited 2008.7.8].
- Nagao, Makoto. April 2008. “New Goals for the NDL’s 60th Anniversary.” National Diet Library Newsletter, No.160.
 <http://www.ndl.go.jp/en/publication/ndl_newletter/160/601.html> [cited 2008.7.14]
- National Diet Library. “Collections of the Tokyo Main Library.”
 <<http://www.ndl.go.jp/en/service/tokyo/data.html>> [cited 2008.7.9]
- National Diet Library. “Collections of the Kansai-kan.”
 <<http://www.ndl.go.jp/en/service/kansai/collec>

- tion/collection_top.html> [cited 2008.7.14].
- National Diet Library. July 2006. "News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Japan Legal Deposit System of the National Diet Library History and Overview." CDNLAO Newsletter, No. 56, Special Topic: Legal Deposit System.
<<http://www.ndl.go.jp/en/publication/cdnla0/056/563.html>> [cited 2008.7.14].
- The British Library. 2008a. "Explaining Our Mission and Vision."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redeflib/mission/index.html>> [cited 2008.7.17].
- The British Library. 2008b.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coldevpol/index.html>> [cited 2008.7.17].
- The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Services. "Our Collection."
<<http://www.bl.uk/reshelp/atyourdesk/docsupply/collection/index.html>> [cited 2008.7.18].
- The British Library. 2008c. "Legal Deposit in the British Library."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legaldep/index.html>> [cited 2008.7.17].
- U.S. Copyright Office. "Circular 7d. Mandatory Deposit of Copies or Phonorecords for the Library of Congress."
<<http://www.copyright.gov/circs/circ07d.html>> [cited 2008.7.9].
- Yoshitaka Ikuhara. 2002. "The National Diet Library and its Responsibilities."
<http://www.iatul.org/doclibrary/public/Conf_Proceedings/2002/Ikuhara.pdf> [cited 2008.7.14].